

“5년간 탈원전 바보짓”...尹 탈원전 폐기 선언

경남 창원 두산에너지빌리티 방문...협력업체 간담회 “우리 원전 경쟁력 세계 어느기업도 흉내낼수 없어”

윤석열 대통령은 22일 “더 키워나 가야 할 원전 산업이 지금 수년간 어려움에 직면해 아주 안타깝고 지금이라도 바로 잡아야 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경남 창원 에너지빌리티를 방문해 원전 원전 협력업체들과의 간담회에서 “우리가 5년간 바보같은 짓을 안하고 원전 생태계를 더욱 탄탄히 구축했다면 지금은 아마 경쟁자가 없었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 원전은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과 안정성을 인정받고 있다. 예산에 맞게 적기에 시공하는 능력, 온타임 온 버짓(On Time On Budget)은 전세계 어느 기업도 흉내낼 수 없는 우리 원전의 경쟁력”

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경쟁력은 하루 아침에 만든 게 아니라 여기 계신 원전기업과 협력업체가 생태계를 수십년에 걸쳐 탄탄히 구축한 결과”라고 평가했다.

윤 대통령은 간담회에 앞서 두산에너지빌리티 원자력 공장을 방문해 건설이 중단돼 있는 신한울 3.4호기 원자로 주단조, 신호기 6호기 원자로 등의 설비가 있는 단조 공장을 둘러봤다.

윤 대통령은 “방금 공장을 둘러봤는데 과연 이런 시설을 탈원전을 추진한 관계자들이 이걸 다 보고 이 지역 산업 생태계와 현장을 둘러봤다면 과연 이런 의사결정을 했을지 의문”이라며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비판했다.

이어 “원전 산업이 어려움에 직면해 아주 안타깝고 지금이라도 바로 잡아야 한다. 지금 원전 수출 시장의 문이 활짝 열려 있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정책 방향은 잡았다. 탈원전은 폐기하고 원전산업을 키우는 것으로 방향을 잡았지만 방향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를 신속하게 케도에 올려 놓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원전 생태계 거점인 창원의 산업 현장, 공장이 활기를 찾고 여러분이 그야말로 신나게 일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또 신한울3.4호기 건설 재개와 관련해 “법질적차와 기준은 준수하되 최대한 시간을 단축해 효율적으로 수행할 것”이라며 “제가 직접 챙기고 미래 원전시장 주도권 경쟁에서 저와 우리 정부 관계자들도 원전 세일즈를 위해 백방으로 땀 흘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행사는 지난 4월 당선인 시절 원전 중소기업인 진영 TBX를 방문, “원전산업을 직접 챙길 것이며 다시 방문하겠다”고 한 약속을 지키는 차원이다.

뿐만 아니라 산업통상자원부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대동, 취임 후 첫 원전산업 현장을 방문해 일감 창출과 금융지원 및 시장 확대 방안 등 지원 정책을 발표함으로써 사실상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 ‘완전 폐기’를 선언하고 원전 산업 복원의 첫발을 뗀 자리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날 원전 협력업체와의 간담회에서 산업부와 중기부는 각각 원전산업 협력업체 지원 대책과 원전 중소기업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원전산업 협력업체 지원방안에는 ▲올해 원전협력업체에 925억원 규모로 긴급 일감 발주 ▲2025년까지 총 1조 이상 일감 신규 발주 등이 담겼다. /뉴시스

강기정·홍준표 “영호남 관문공항 육성” ‘영호남 반도체 동맹’에 대해서도 공감대

강기정 광주시장 당선인과 홍준표 대구시장 당선인이 수도권 집중화에 맞서 관문공항 육성을 통한 산업 재배치를 한 목소리로 주장했다. 두 시장은 21일 밤 지방소멸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진행된 MBC 100분토론에 출연해 수도권 집중화에 따른 문제와 국가균형발전의 필요성에 공감했다.

두 당선인은 보수·진보정당 모두 균형발전을 중요 국정과제로 추진했으나 정치적 물론 산업과 금융, 교육과 문화까지 수도권 독점이 가속화되고 있다는데 뜻을 같이하고 ‘수도권 블랙홀’에 맞설 정부 차원의 지방소멸 대책을 촉구했다.

이를 위해 관문공항 육성을 우선 강조했다.

홍 당선인은 “70~90년대에는 고속도로가 경제발전 원동력이었다면, 지금은 공항이 그 역할을 맡고 있다”며 “원활한 인적·물적 수송이 가능한 하늘길이 열리지 않는 도시는 망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어 “국내 항공화물의 98.2%가 인천공항을 통과하고 있는데, 지리적 위상상 북한 도발 등 유사시 가장 취약한 지역임에도, 인천공항 독점 현상은 더욱 견고해지고 있다”고 지적한 뒤 “정부가 인위적으로 20%씩만 무안, 부산, 대구공항 등으로 옮기는 것도 지방소멸 극복의 시작점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강 당선인은 관문공항 육성과 함께 신산업 인재 양성 인프라에 방점



홍준표 강기정

을 짚었다.

그는 “무안공항을 호남 관문공항으로 육성하는 프로젝트는 광주시장 공약이기도 했다”며 “재 대통령과 정부로부터 굵직한 세부정책이 끌어 내기 위해 대구와 손을 잡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가균형발전론을 이 긴 경제성장론은 없었고, 인위적 산업 자원 재배치 만큼이나 전문교육을 통한 지역균형발전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두 당선인은 ‘영호남 반도체 동맹’에 대해서도 공감했다.

강 당선인은 “산업동맹에 지역공공의 목소리가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며 “광주와 대구가 영호남 반도체 동맹을 맺어 정부에게 수도권 중심 권력분산을 주장하자”고 제안했다.

이에 홍 당선인은 “대구도 경북대를 중심으로 반도체 인재양성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고 지방 중심 반도체 산업과 인재 육성에 공감했다. /김도기 기자

민주당 시도당위원장 공모 광주는 단수·전남은 경합

더불어민주당 8월 전당대회를 앞두고 차기 광주시장·전남도당 위원장이 누가 되느냐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2일 광주지역 정가에 따르면 연임을 한 송갑석 민주당 광주시장위원장을 이을 시도위원장 후보로 이병훈 의원(동남)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2년 전 광주시장위원장 선거에는 조선인 이병훈·민형배 의원 등이 출마를 표명했으나 합의추대가 이뤄지지 않아 재선인 송 위원장이 연임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혔다.

2년 전 이 의원과 민 의원의 경쟁구도 속에서 연장자인 이 의원쪽으로 가이하지 않느냐는 의견이 있었던 터라 이번에는 이 의원이 무난하게 시도위원장 자리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민 의원은 지난 4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강행 처리를 위해 민주당을 탈당, 자격이 없다.

민 의원은 당 안팎의 여러 상황에서 8월 전당대회 전까지 복당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으며 8월 전당대회 전에 복귀할 경우 시장위원장 보다는 최고위원 도전설이 나오고 있다.

송 위원장은 8월 전당대회에서 최고위원 도전 여부를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전남도당위원장에는 재선인 신정훈 의원(나주·화순)과 조선인 윤재갑 의원(해남·완도·진도)이 출마 의사를 밝히고 있다.

‘금품 수수 의혹’ 광주시의원 들 연 해이출국...경찰 수사

급진 비위 연루 의혹을 받는 현직 광주시의원이 소환 조사를 앞두고 들연 해외로 출국, 3주 가량 연락이 끊겨 경찰이 행방을 쫓고 있다.

22일 지역 정가와 광주경찰 등에 따르면, 금품 수수 의혹에 휩싸인 광주시의회 A의원이 이달 2일 필리핀으로 들연 출국한 뒤 연락이 끊겼다.

앞서 경찰은 한 사업가가 사업상 편의를 부탁할 목적으로, 수천만 원대 금품을 A의원의 지인 B씨에게 건넨 정황을 포착했다.

이후 수사에 나선 경찰은 B씨를 형사 입건하고, 일부 금품이 A의원에게도 흘러 들어간 것으로 봤다.

이에 따라 소환 조사 일정을 조율하던 중, A의원이 필리핀으로 출국했고 개인 휴대전화도 꺼진 상태라고 경찰은 전했다.

실제 A의원은 최근 휴가를 내고 제8대 시의회 마지막 임시회 일정에 모두 불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의원이 해외로 도피·잠적한 것이 아닌가 보고, 소재 파악에 나섰다.



한국행정학회 하계공동학술대회 한태평양 시대를 맞아 전남도가 민선8기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의 중심지로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2022 하계공동학술대회 및 국제학술대회'가 여수에서 개최돼 전국적 관심을 끌었다. /전남도 제공

민주, 전당대회 8월28일 올림림픽경기장서 개최

“워크숍서 의견 듣고 다음주 지도체제·대의원제 논의”

더불어민주당은 22일 차기 당대표와 최고위원을 선출하는 전당대회를 오는 8월28일 열기로 결정했다. 전당대회와 지도체제 관련 논의는 다음주에 본격화할 예정이다.

민주당 전당대회준비위원회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진행된 2차 회의에서 이같이 의결했다고 전용기 전준위원은 전했다.

전 위원은 이날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오늘 결정 안건은 전당

대회 일정을 확정하는 안 하나였다”며 “오는 8월28일 올림림픽경기장에서 전당대회를 진행한다. 경기장은 1만5000석 정도로 안다”고 밝혔다.

이어 “6월21일부터 30일 정도까지 지역 지역위원장, 당원들로부터 의견을 받는 당무 발전 의견 수렴과 강령 분과에서 민주당이 야당의 역할을 하기 위한 강령 관련 토론회 준비(를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대의원·권리당원 투표권 비율 등

를 변경 여부 및 지도체제와 관련해선 “내일모레(오는 24일) 있는 (민주당 의원) 워크숍에서 다양한 의원들의 이야기와 생각을 듣는 자리를 가진 이후에 다음주 쏘면 지도체제, 대의원제 선출 방법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부연했다.

아울러 전 위원은 “(전준위의) 앞으로 추진 과제는 분과별 분임토의를 진행하고, 그다음에 전체회의를 통해 안건을 결정하고 이후 언론에 브리핑하는 순서로 진행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뉴시스

尹 국정수행 ‘긍정’ 47.6%·‘부정’ 47.9%...첫 ‘데드크로스’

20·60대 제외 전 연령층서 ‘부정’ 우세...알앤씨 조사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취임 후 처음으로 부정평가가 긍정평가를 앞선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여론조사업체 알앤씨가 뉴스핌 의뢰로 지난 18~21일 전국 성인 1004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서 윤 대통령 국정 수행 긍정 평가는 47.6%, 부정평가는 47.9%였다. 잘 모른다는 응답은 4.6%였다.

긍정 평가는 전주보다 4.9%포인트 떨어졌고 부정 평가는 4.9%포인트 상승하며 취임 후 처음으로 ‘데드크로스’가 일어났다.

연령별로는 20대와 60대를 제외한 모든 연령대에서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30대에선 부정 49.1%, 긍정 46.2%으로 부정 평가가 다소 높았다. 40대에서는 부정 평가가 62.9%로 긍정(33.4%)의 배에 가까웠다. 50대

(부정 50.1%, 긍정 45.8%) 역시 부정 평가가 많았다.

반면, 18세 이상 20대에서는 49.4%로 긍정 평가가 부정 평가(48.4%)보다 약간 높았으며 60대에서는 긍정 평가가 57%로 연령대 중 가장 높은 지지율을 보였다.

지역별로는 부산·울산·경남(53.3%), 대구·경북(55.9%), 강원·제주(48.7%), 서울(49.6%) 경기·인천(50.2%)에서 긍정 평가가 높았다.

반면 전남·광주·전북(69.5%), 대전·충청·세종(52.4%)에서는 부정 평가가 우세했다.

알앤씨는 주식 하락세와 고물가 등 경기 침체 불안감이 지지율 하락에 영향을 미쳤다고 봤다.

국민의힘 지지율도 동반 급락, 국민의힘은 전주보다 5.9%포인트 떨어

어진 44.3%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은 1.1%포인트 하락한 29.6%였다. 양당간 격차는 전주 19.5%포인트에서 14.7%포인트로 4.8%포인트 줄었다.

정의당은 3.6%, 기타 정당 3.1%, 지지정당 없음 18.2%, 잘 모름은 12.2%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별·연령대별·지역별 인구 구성비에 따른 비례할당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자동응답조사 방식으로 실시했다.

응답률은 2.7%이고, 표본오차는 95%의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2년 4월 말 행정안전부 발표 주민등록 인구 기준 성, 연령, 지역별 셀가중값을 부여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http://www.nsc.go.kr) 여론조사결과 등록현황을 참고하면 된다.

‘달레마’ 광주시의회 사설보좌관 운용 주목

국회의원 1인당 9명 보좌진 vs 광역 4명당 1명 형평성 문제

시의원 보좌관에 대한 최저임금법 위반 의혹이 불거진 광주시의회가 논란이 된 기존 방식의 사설보좌관 운용이 계속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유급보좌관제의 구조적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악순환이 되풀이될 가능성이 높아 지방자치법개정 등 근본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2일 광주시의회에 따르면 8대의회는 23명의 의원을 지원하기 위해 유급보좌관제를 도입했다.

예산을 배정해 시간선택임기제 공무원 14명을 채용하고 7명은 의원들이 사설보좌관을 운용했다.

이번에 문제가 된 것은 사설 보좌관제이다. 의원 1인당 1인 보좌관을 두기 위해 교육직으로 시의원들은 한 달에 100만원 안팎을 각출해 1인당 245만원 월급의 사설 보좌관을 채용했다.

법적으로 보좌관을 둘 수 없는 시의원들이 사실상 편법으로 사설 보좌관 제도를 운용하고 있는 것이다.

논란은 2년 전 보좌관의 급여 일부를 다시 돌려받은 시의원이 제명된 데 이어, 이번에는 보좌관 한 명이 최저임금법을 위반했다며 시의원을 노동청에 고소했다.

해당 의원인 박미정 의원은 “고의적 미지급도, 횡령도 아니다. 사법

부 판단에 따라 책임질 일이 있으면 책임을 지겠다”고 밝혔지만, 결론이 어떻게 나온 9대 의회에서는 기존 방식의 사설보좌관을 운용할 것인가를 놓고 ‘갑론을박’이 이어질 전망이다.

이미 지난해 행정안전부 감사에서 사설보좌관 채용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설상가상으로 시의회의 시간선택 임기제 공무원 14명도 채용할 수 없게 됐다. 이 역시 감사 지적을 받았다.

이에 따라 9대 의회에서는 의원 보좌인력이 대폭 축소됐다.

최근 채용된 정책지원관 5명만이 의정지원활동을 할 수 있게 됐다. 내년에 추가로 6명이 채용할 예정이지만 8대 의회와 비교해 당장 18명의 보좌인력이 부족해 의원들의 시름이 깊다.

1명당 9명의 보좌진을 둘 수 있는 국회의원과 달리, 광주시의회는 올해 4명당 1명, 내년에는 2명당 1명의 보좌인력을 지원받을 수 있어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지방자치법 개정 등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은 이유다.

특히 광주시의회는 23명의 의원 중 17명(73.9%)이나 조선의원이러 우려가 크다.

호매민평 이태헌

벌써?

6월 11일

30 25 20 15 10

태헌